

“순직해병 특검법안 위한 소지 거부권 행사 않으면 직무유기”

정진석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野 추천만으로 이뤄진 임명절차 대통령 공무원 임명권 훼손·박탈 공수처 수사 후 특검 해도 늦지 않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단독으로 발의하고 처리하는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 첫 현안질의를 열었다. 원 구성 이후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이 복귀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현안질의의 중요 주제는 야당이 추진하는 순직해병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이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진석 비서실장에 “공수처가 수사에 미진하다고 하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특검을 완전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비서실장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검법이 성안돼야 한다”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야당의 추천만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시스

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 법안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사항임에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속해있는 정당인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안에 대해) 합의한다면 이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도 했다.

정 비서실장은 순직해병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과실치사 부분은 경찰에서, 외압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대령(전 해

병대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사건이다. 이는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실장은 특검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공수처 자체가 상설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특검이 도입되면 그 즉시 공수처가 한 모든 수사를 특검에 넘겨야 해서 상설특검 위에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미흡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순직해병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에 격노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7월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격노한 것을 보았느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그날도 무슨 주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름 휴가 직전으로 기억하고 있다. 저희 앞에선 화낸 적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는 류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느냐”고 재차 묻자, 김 차장은 “저도 (들은 바)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고 했다. 해당 발언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냐고 고 의원이 묻자 김 차장은 “언론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알게 됐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민석 의원
서울 영등포구을·4선

한준호 의원
경기 고양시을·2선

이성운 의원
전북 전주을·초선

김민석·한준호·이성운, 野 최고위원 출사표

집권플랜, 언론개혁, 尹 투쟁 내세워
“이재명과 함께 당이 뭉쳐야” 강조

제22대 더불어민주당 총선 선거대책 위원회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4선)과 MBC 아나운서를 지낸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2선), 서울 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운 의원(전북 전주을·초선)이 1일 8·18 민주당 전당대회에 열리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민석 의원은 ‘집권플랜본부장’, 한준호 의원은 ‘언론개혁’, 이성운 의원은 ‘대통령실과의 투쟁’을 내걸었다. 또한 이들은 ‘이재명 1극 체제’ 우려에 대해서는 “오해”라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당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실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준비된 집권 세력만이 다가올 폭풍 정국을 헤쳐갈 수 있다”며 ▲당원주권 ▲정책협약 ▲예비내각 등의 집권플랜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당원주권과 관련해서는 “당원 권한 확대를 교육 확대, 경선 확대로 확장해 탄탄한 대중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책협약에 대해서는 “갈등 조정의 사회협약 원리와 국내외경험에 근거한 각종 정책협약을 추진해 다원화 시대의 문제 해결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말했다. 예비내각에 대해서는 “당 내외 인재 발굴을 체계화해 광범한 인적 풀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고위 산하에 3대 과제 등을 추진할 집권플랜본부를 설치하고 민심을 받들어 최고위원 2년 임기 내 정권교체의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더 단단하

게 해달라. 일 잘하는 최고위를 구성해 달라”며 “당대표와 협력해 집권 준비를 담당할 집권플랜본부장도 선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을 내세운 한준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서 싸웠던 제게 정치는 ‘어두웠던 과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해답’이라고 최고의원 출마의 변을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이재명 독주’라는 비판에 대해 “수많은 당원동지들이 이재명 전 대표를 지도자로 선택했고 여전히 굳건하게 지지하며 그 선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들 모두 ‘총성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할 진정한 지도자로 이재명 전 대표를 선택한 것”이라며 “그한결같은 선택들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정권교체’라는 성과로,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증명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과의 투쟁’을 내세운 이성운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흔히 말하는 ‘흙수저’ 공무원이라 골프나 주식 과도 거리가 멀다”며 “정치 검사들이 보기에는 검사 같지 않은 자로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검사로서 바른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검찰 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며 “윤석열 검찰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제가 수권정당 민주당 정권 교체에 디딤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심동일체’가 돼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원동일체’가 돼 당원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배신의 정치’ ‘공한증’... 與 당권주자 난타전

한동훈 “일부 후보들 ‘공포 마케팅’ 지지자도 쫓아내는 자해의 정치”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등 공세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한동훈 대세론’을 깨기 위해 ‘배신의 정치’ 공세를 지속하자,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공포 마케팅은 있던 지지자들도 쫓아내는 뺄셈과 자해의 정치”라며 역공에 나섰다.

당정 관계를 두고 당권주자 간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한 후보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후보들이 ‘공포 마케팅’에 여념이 없다”며 “이는 구태이자 가스라이팅이고, 확장은커녕, 있던 지지자들도 쫓아내는 뺄셈과 자해의 정치다. 전당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당대표 후보의 ‘배신’ ‘절연(絶緣)·윤 대통령과 절연’ 등 공세로 인한 것이다.

나경원 후보는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이해될 수 있다”면서도 “그 특정인을 위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한 후보를 겨냥했다.

원 후보는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뿐이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배신, 당에 대한 배신은 별 거 아니라는 말로 들린다”고 한 후보를 직격했고, 윤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세 후보가 한 후보를 향해 ‘배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전당대회 양상이 ‘한동훈 대 반(反)한동훈’으로 이어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트라우마가 있는 전통적 보수층의 정서를 건드려 한 후보의 지지세를 약화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나 후보는 ‘당원 24년’ ‘정통 보수’ 등을 강조하며 지난해 정치에 입문한 한 후보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원 후보는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으며 ‘대통령실-여당 원팀’을 주장하고 있다. 보수 진영 내에서 한 후보의 약점이라 지적할 수 있는 ‘경험’과 ‘당정 관계’를 들어 공격하고 있는 셈이다. /서예진 기자 syj@

이 같은 공격이 계속되자 한 후보 캠프는 전날(6월 30일) “아무리 ‘공한증(恐韓症)’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된다”고 응수했다. “공한증”은 본래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잘 이기지 못하는 현상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한동훈에 대한 공포 현상’으로 쓰였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다른 후보들이) ‘나중에 탄핵까지 할 거다’라는 식의 공포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제가 막을 거다.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반박했다.

나 후보를 향해서는 “그때는 일종의 학교폭력 피해자셨는데 지금은 학교폭력 가해자 쪽에 서고 계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 후보가 친윤계 초선 의원들의 ‘연관장’으로 인해 출마를 포기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또 원 후보를 향해서는 “지난 2018년 무소속으로 탈당한 상태에서 제주지사로 나오셨다. 그때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조직위원장 1차 54명 임명

서울 영등포구에 허은아 대표
경기 화성수에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은 1일 서울 영등포갑(허은아 대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천하람 원내대표), 경기 화성수(이준석 의원) 등 조직위원장 54명을 임명했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차로 86명 중 54명의 조직위원장 임명을 의결했다.

이번에 이름을 올린 조직위원장에는 지도부 중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성균 최고위원(경기 화성정), 이주영 정책위의장(서울 송파갑) 등이 있다. 또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 양향자 전 원내대표(경기 용인

갑) 등 이전 지도부도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김철근 사무총장(서울 강서병)·김성열 수석대변인(서울 양천갑)을 비롯해 정재준 전략기획부총장(서울 강서을)·이경선 조직부총장(서울 서대문갑)·이성진 홍보부총장(충남 천안병)·김범준 당대표 비서실장(경남 거제) 등 주요 인사들도 조직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번에 임명된 조직위원장 54명 중 1960년대생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1980년대생은 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연소 조직위원장은 1994년생 송창훈 경기 용인정 조직위원장이었다.

한편 개혁신당은 내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정밀 심사를 통해 나머지 조직위원장도 인선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